민주 "굴욕외교 중단을"… 국힘 "미래위한 발걸음"

尹 오늘 방일… '외교 논쟁'
野 "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與 "양국 신뢰 다지는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하루 앞둔 15일, 용산을 찾아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과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3자 변제 해법은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 체제로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려는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3자 변제 해법에 따른 결과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은 무능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기어코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고 국익과 미래를 훼손하려 하면 묵과 않을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해법에 대해 "가해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이 모두 빠졌다"며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이 갚으란 셀프배상이다. 이것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호도하는 궤변에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 주권과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굴욕외교"라며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굴욕외교로 우리 국가가 얻은 실익이 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게 '4대 국민 요구'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까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관철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를 수용해 일본에게 요구하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오염수 방류 철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대국화 추진 중단을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제기하라"며 "이번 순방은 굴욕 외교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재물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의 재개이자 한일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 정상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돈독한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글로벌 정세와 동북아 경제와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 없이 공동 기자회견"

대통령실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이후 불편한 관계가 증폭되고 여러 불신이 가중됐고, 그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열리는 공동 언론기자회견에서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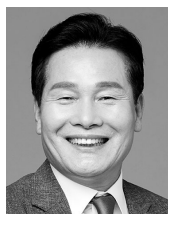
그는 "한일 정상이 심도있는 시간을 갖고 양국 언론 앞에서 차례로 정상회담 결과를 말할 것"이라며 "자기 나라 입장에서 강조하고, 자국민에 알리고 싶은 것들과, 양국 정상이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교류는 새로운 출발로, 이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시스

주철현 "SRT 전라선, 9월부터 하루 2편 왕복운행"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은 15일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이 오는 9월 추석 전에는 현실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국장과 면담한 결과,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에 수서발 SRT를 투입해, 각 하루 2편씩 왕복운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여수행 KTX 노선은 변함이 없으니, 서울로 오가는 고속철도 노선이 하루 편도 2편, 왕복 4편 늘어나는 셈"이라며 "서울 강남이나 강동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서발 SRT를 이용하면 10% 저렴한 요금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가급적 서둘러서 9월 이전에 수서발 SRT의 운행을 시작하고, 편수도 늘려 줄 것을 촉구했다"며 "예타 진행중인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서울-여수간 운행시간을 2시간 초반대로 단축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재갑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 대표 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15일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개인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7법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의무 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인 윤 의원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 문제 협력" 한목소리

김기현 "격주 한번씩 만나자"
이재명 "정책협의회 만들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회동했다. 김 대표는 비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격주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겹치는 대선 공약을 위주로 정책협의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 차,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 문제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그간 행보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입법과 관련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결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안이 계류 돼있다. 이 대표께서 성남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 사회에서 살아본 입장을 공감할거라 생각하고, 속도 내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득세 중과세 개선, 양도지방세 문제 등 엇박자가 나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보폭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하는 부분이 지난해 일몰됐는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쟁점이 덜하니 빨리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며 "격주에 한번씩 만나 뵙고 식사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게 상당히 많다"며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통 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만들고, 공통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할건 하고 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개호 공천TF단장 "'李 자진사퇴' 사실 가까운 얘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15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대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라며 "(이 대표도)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질서 있는 퇴장론'에 대해선 "퇴장까지는 직접적인 워딩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내년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인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굳이 보완을 한다면 정체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당과 이념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함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점도 곁들여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 평가 공천 반영 의견에 대해선, "혁신위 요청안 가운데 '당원들의 국회의원 평가 참여' 부분은 빠졌다"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뜻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